■ 지방선거 핫코너

민주 서구청장 후보 "경선 보이콧" "검찰 고소" 맞불

민주당 서구청장 경선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선옥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관권선거를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보이콧' 검토라는 배수진을 치자 전주언 예비후보가 김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맞불'을 놓고 나섰다.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그간 접수된 제보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하반기 서구청 공무원 30여 명이 약 8천여 명의 민주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중앙당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권선거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경선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이에 맞서 이날 김선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김 후보가 제기한 관권선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고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교육시설 주차장 야간에 개방"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주차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학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고등학교의 경우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특수한 교육 상황이 있는 만큼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야간과 휴일에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지역민에 개방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설치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확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20대 핵심공약' 발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강운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 공약 4대 과제 2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강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 ▲경제규모 중상위권 도약 ▲R&D특구 개발 및 LED 특화단지 조성 ▲문화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문화산업 집중 육성 ▲명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향상 ▲국제 인권 평화공동체 메카 조성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개방형 국제도시 건설 ▲시민참여와 소통의 시정 실현 등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정찬용 "민주당 후보들 이전투구 말라"

정찬용 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은 더 이상 선거판을 더럽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또 "민주당 시장 후보들의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광주 지방선거판이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등 진흙탕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번 6·2지방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독점 체제를 허물고 2012년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민주당 후보들의 이전 투구는 시민들의 정치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전남도 부채 3년간 7배 증가"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남도의 부채가 2007년 700억 원에서 2009년 5천8억원으로, 최근 3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하고,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발족 5년 만에 자기자본과 비슷한 3천586억원이나 된다"면서 "전남도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내용과 현황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무대책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화진 "남구에 콜센터 유치 추진"

김화진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남구에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1천 개 창출을 위해 콜센터 유치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백운 광장에 수년간 방치된 흉물 쇼핑센터를 개축해 인터넷 콜센터를 유치해 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민·관·금융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콜센터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 공심위 재심을 통해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일태 "영암 군수 예비후보 등록"

김일태 영암군수가 '재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값진 경험과 준비하고 계획한 중장기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과 행정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 등 상 사업비만도 1천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영암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박세용 3일 선거사무실 개소

박세용 전남도의원 영암 2선거구 예비후보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학산면사무소 앞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고 선거 필승 의지를 다진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법률전문가로서 도 정책 및 행정입법이 바르게 세워지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영암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신한 봉사자가 되고 싶어서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박 후보는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낭주어린이집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원 출마"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이 광산구청장 출마를 접고 광주시의원 광산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장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산구청장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출마 예정자들과 내부 조율을 거친 결과 구청장 출마를 포기하고 광주시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방의원, 교육위원, 민주화운동, 시민사회운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인권의 광주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이 내일 선거사무실 개소

윤병이 광주시의원 남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2일 오후 3시 남구 방림동 동화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지역민과 함께 고뇌하고 아름다운 남구발전을 위해 시의원에 도전한다"면서 "민의의 대변자이자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법률연맹 '백서' 타당성 없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최근 법률소비자 연맹이 발표한 '광역의원 백서'가 의회활동을 회의시간만으로 한정해 분석한 것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시의원은 회의 참석은 물론 의원간담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현장방문 활동, 각종 지자체의 행사참석, 청원 등의 처리 등 매우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정활동비를 계산하려면 회의시간만이 아닌, 이러한 모든 의정활동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광역의원, 여성에 우선권"

민주당 '공천방안' 발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6·2 지방선거에서 여성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성공천방안을 발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공천방안을 논의해 의결을 마쳤다"며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거구를 여성의무공천 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여성출마자가 있을 경우 가급적 우선 공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여성의무공천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의 여성후보자는 2인 선거구의 경우, 단수공천 또는 '가'번을 배정하고 3인 선거구에는 '가'번 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여성후보자에게 가장 앞 번호에 해당하는 '가'번 배정토록 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의결된 모든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적으로 수행될 사항들로 민주당은 앞으로 여성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위한 길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군 통합 등 쟁점사항 본격 조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이달말까지 활동 시한 연장

4월 말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에 나서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재점화했다.

미합의 쟁점이었던 특별시 및 광역시 개편 여부를 비롯해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군의 통합절차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재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전국을 60~70개 규모의 준 광역시 규모로 재편한 뒤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지역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합 대상 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을 빚는 등 다양한 대립양상이 표출되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위는 우선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군 통합 여부와 통합된 구·군의 단체장 선출방식, 구·군의회 존치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은 쟁점부터 하나씩 조율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위는 또 향후 구성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도의 지위 및 기능,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선 시·군 통합방식과 관련,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가 통합기준을 마련한 후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을 권고하고 각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 투표 등을 통해 최종 통합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일 방중 임박? 곳곳서 징후 포착

정부당국자 "이달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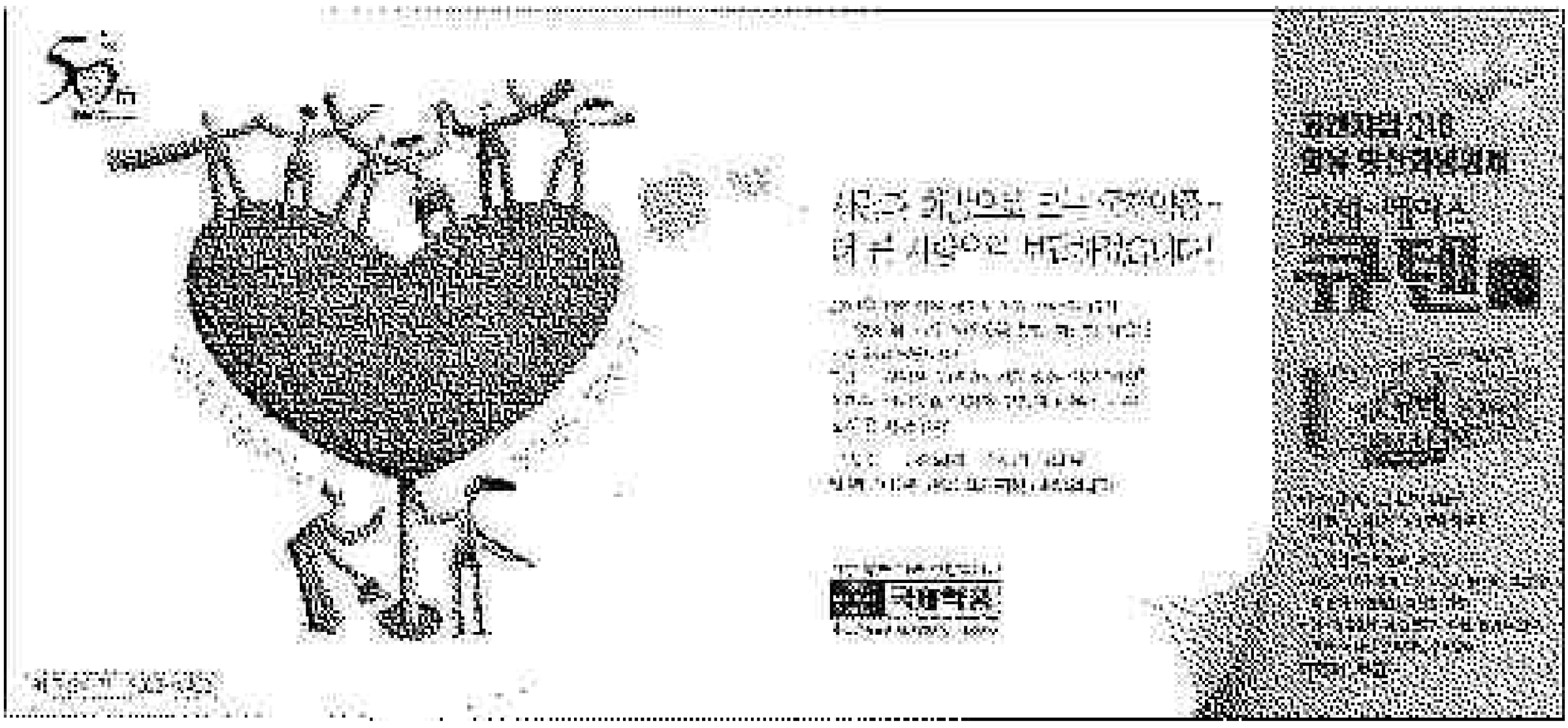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임박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장 방중 시기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김 위원장이 중국과 인접한 평안북도 등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방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선발대가 베이징으로 출발하고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지역에 특별보안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역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 소식통은 이날 "30일 오전 평양발로 베이징에 도착한 국제열차에 건장한 체격에 세련된 복장을 한 북한주민 20여 명이 하차, 북한 대사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